

올림픽 급수사업 국비 부족 도로·상수도 공사까지 타격

**동계 상수도망 사업 관련
정부, 도 광특회계 사용 제한
일선 시·군 관련사업은 중단위기
내년 지방도 400억원 편성
올해 예산의 45% 수준 불과
도 지역건설경기도 침체 우려**

도가 내년 지방도 사업비를 올해의 절반 이하로 검토하는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복지예산 급증에 의한 예산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급수체계 구축사업비 가운데 절반은 70%의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견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어서 동계올림픽 및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상황이 시급하다.

29일 도에 따르면 내년 지방도 관련 사업비를 400억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올해 9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급수체계 구축사업인 대관령 식수전용저

수지와 상수도망사업 중 식수전용저수지 사업비의 70%는 국비로 추진하고 상수도망사업은 시·도별로 배정되는 상수도 광역특별회계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총 830억원의 올림픽 개최지 급수체계 구축사업비 중 400억원가량을 차지하는 상수도망사업을 광특회계로 추진하면 나머지 시·군의 상수도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도의 상수도 광특회계 규모는 연간 470억원 수준이다.

도가 지방도 사업비를 반토막내고, 시급한 올림픽 개최지 급수체계 구축사업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수년간 재정압박이 심각할 전망이다.

도는 올해 당초예산안 규모를 지난해보다 2,500억원 늘어난 3조2,800억원으로 편성해 다음 달 2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문제는 도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늘어나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대폭 감소한다는 데 있다. 우선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시설과 경기장 진입도로에 지원되는 국비 1,000억원에 대한 도

비 부담금 3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국비보조율이 결정되지 않은 올림픽 개최지 급수체계 구축사업비는 이번 도 예산안에 반영하지도 못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무상보육 등 복지사업비는 올해 수준으로만 반영, 증액이 예상된다. 사회복지사업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2005년 64%에서 2011년에는 52%로 감소,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필요한 도의 신규재원은 내년부터 6년간 매년 900억~1,700억원, 총 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을 조정, 복지사업의 국가 환원 및 국비지원을 조정이 내년 초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내년은 그나마 동계올림픽을 위한 시설투자 초기 단계여서 다행이지만 2014년부터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社 說

춘천~속초 고속철 예산 50억 집행, 절박하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의 절저한 공조로 내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1월부터 예산국회다. 도 국회의원 9명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도와 정치권은 내년도 정부예산 4조4,000억 원 이상을 확보했지만, 누락된 중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대 화두는 지난해 책정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산 50억 원의 정상집행이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예비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칫 기준치를 넘지 못할 경우 지난해 확보했던 예산이 불용될 뿐만 아니라 도의 숙원사업이 물거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서고속화철도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신동북아 경제권 시대 대비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업을 장기 보류한다면 정부 스스로 만든 철도망 구축계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여기에다 예산 50억 원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국회에서 반영했다. 연내에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를 반드시 관찰하고 반영이 안 된 예산도 상임위와 여결특위의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특히 ‘강원랜드 규제법 상정’ 등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좋지 않은 폐광지역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연간 300억 원(총 2,500억 원)이 반영돼야 할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예산이 전혀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예산은 고작 38억 원만 책정됐다.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지역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고성 국회의정연수원은 기획재정부가 24억 원 중 8억5,000만 원만 승인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예비지정된 만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소요액(87억 원) 전액을 확보해야 한다. 도와 정치권이 합심 즉, 공조하면 예산 확보는 기대할 것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 확보 문제의 본질은 공조 자체가 아니라 도정과 국회의원들이 어떤 구체적 활동을 펴느냐 하는 것이다. 예산 확보 낙관은 금물이다. 보다 전략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연내 성사 불투명

강원도 3대 현안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과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조성 사업이 연내 성사가 불투명, 장기 과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29일 도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연내 추진을 위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정부예산 국회심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수시배정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50억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기재부 “고속 철도 예타조사 후 결정” 입장 道, ‘오색’계획안 재제출 안해… 심의 지연

조사 결과후 사업예산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관련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해 국고로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또다시 장기 과제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조성 사업 역시 연내 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최 지사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순쯤 지난 6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조성사업 기본 개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개발계획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조성 사업을 심의할 국립공원 위원회 개최 시기도 자연스럽게 늦어지게 됐다.

이는 민간위원들과 국립공원위원들의 현지 실사와 평가 등의 물리

적 시간을 고려할 때 최종 결정까지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도는 내달 10일 이전까지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조성사업 기본 개발계획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자칫 국립공원 위원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조성 사업 역시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도 관계자는 “연말 대통령선거와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연내 성사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은복